

검찰 '대장동·위례' 이재명 소환 통보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27일·30일 중 제언 대장동 등 관련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57)은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이나 30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

시 내부 비밀을 화천대유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총 81회 언급됐으며, '정치적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

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직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 확인 작업도 필요할 상황이다.

정 전 실장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전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428억원에 달하는 이 지분에 대해 "(김씨가) 이 시장이 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전부 허언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통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뉴스

'5·18 北개입설' 지만원, 구치소 수감 징역 2년 확정... "5·18사진 속 시민은 북한 특수군" 주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지씨에 대해 형집행정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

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씨가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빈약하다며 5·18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감안할 때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수속을 면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날 형집행이 이뤄졌다.

/김도기 기자

지원자 1명 그친 광주전남연구원장 공모 재공고 논의 착수...광주·전남, 25일께 재공고 여부 확정

(재)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 제5대 원장을 공모한 결과 단수 지원에 그치면서 원장 선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공동 출연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시·도의회 발로 분리론이 대두된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조직 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다.

16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연구원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지원자가 1명에 그쳤다.

원장 공모는 내부 규정상 응모자가 예정 직위 수의 2배(2명)에 미달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공고를 해야 한다.

규정에 재공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도를 비롯해 연구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기일이 확정될 방침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주(16~20일)내로 광주시·전남도, 이사회와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중으로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5일께 재공고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현 박재영 원장의 임기를 당분간 연장하거나, 한 시적으로 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연구원을 운영하는 방안은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20년 2월 25일 취임한 박재영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월 24일 만료된다.

한편 원장후보자를 심사하는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광주시, 전남도, 시·도의회,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 '마을행정사 활성화' 간담회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운영일)가 13일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양만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미옥·이우형·한윤희 의원과 광산구 마을행정사, 관계 공무원 등 13명이 참석해 '마을행정사 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광산구 마을행정사는 총 9명으로 '광산구 우리 마을행정사'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 11월 위촉 후 자발적인 봉사과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 복잡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노무산재 관련 ▲각종 인허가 ▲외국인 출입국 ▲차량등록 및 진정서 ▲행정심판 관련 등의 상담업무를 수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는 각종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마을행정사들도 보람을 느끼며 활동 중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행정사에 대해 알고 그 효용 가치가 널리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기 기자

"국민주권·헌법정신 우롱한 김광동 진화위원장 즉각 사퇴"

5·18기념재단 등 전국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의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5·18재단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전국 8개 민주화운동 단체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를 왜곡·편향하고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을 우롱한 자들을 미화하는 발언을 계속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김 위원장은 4·19에 대해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요구였다'고 평가했다"며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그 정신을 이은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도 주장한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표현했다"며 "두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편향해온 김 위원장의 선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신과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긴급토론회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 문제 진단 및 과제 토론회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 당권개입·굴욕외교·정치검찰...尹정부 맹공

이재명 "이태원 참사, 책임자처벌 방안 마련" 박홍근 "尹, 국민의힘 아니라 윤심의회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포리자르기 수사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당권개입, 대일 굴욕외교,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 관련 정치검찰 행태 등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성토의 장이 됐다. 국민의힘이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내홍에 빠진 틈을 타 정부의 실정을 맹공하며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봉장에 섰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러 "내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조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대통령의 진술한 사과, 이상민 장관 파면,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발언권을 건네 받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은 내팽개치고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밖에 난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내려 당을 이수장으로 만들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유승민을 잘라내고 물까지 개정한 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른바 제2의 진박 감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잘 잘 듣는 친윤 당 대표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남도 '5·18 커뮤니티센터' 조성 속도...2026년 완공 목표

기념사업 구심점 역할...국비 지원 등 건의키로

전남도가 16일 도청 정철실에서 '5·18 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5·18 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5·18 기념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5·18 커뮤니티 센터 조성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5·18 대표 성지인 목포역 인근에 오는 2026년까지 센터 완공을 목표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이번 용역으로 5·18 기념공간 마련 청사진이 제시됐다"며 "전남 5·18 민주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5·18단체를 비롯해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기자

'내부나 외부나'...지스트 차기 총장 촉각 내부 2~3명 교수·외부, 공기업 수장 등 자천타천 거론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차기 총장 후보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차기 총장이 누가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9대 총장 선임에는 최근까지 이어진 학교 내부 인사가 또다시 총장 자리를 차지할지, 아니면 다양한 경력의 외부 인사가 영입될 것인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지스트에 따르면 이날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 초빙공고를 내고 신입 총장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지스트 이사회(이사장 한문희)는 오는 2월 5일까지 총장 지원자 접수를 받은 뒤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총장 선임에는 내부 인사나,

외부 인사나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스트는 그동안 제1대 하두봉 전 서울대교수, 제3대 나정웅 전 카이스트 교수, 제4대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장관, 제 5대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외부인사로 원장(총장)을 역임했다.

반면, 제2대 김효근 원장과 제6대 김영준 총장, 제7대 문승현 총장, 제8대 김기선 총장 등 4명의 내부 인사가 총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총장 후보로 내부에선 부총장을 역임한 A교수 등 2~3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인사로는 정부 공기업 수장을 지낸 B씨와 단체장 출신 정치인 C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스트는 처음으로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총장 후보로 적합한 인사를 발굴하고 나선 가운데 관심이 쏠린다.

호매민평 **이태원**

패셔니스타

날리지말고 잘찍어~ **분위기에맞게!!** **UAE에 오신것만영 오모역시**

*** OKY ***

태현